

월요광장

개발의 방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열린 가을 음악회를 다녀왔다. 음악회 장소로 가는 길들에서 과거와 함께 변화된 양림동의 정취를 느꼈다. 그렇게 걷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오래 전 지역 활동가 한 분이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양림동 주공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이제 양림동도 음영의 구분이 뚜렷해지겠구나' 걱정하시던 모습이 생각난 것이다.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주변의 단독주택 단지도 빛을 받기 위해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건데, 현재 양림동을 보면 그분의 예상이 빗나간 듯 보인다. 문제점도 있지만 다양한 재생 사업을 통해 양림동은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을이 된 것 같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나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이 실행

되고 있는 지역에 지역 주택조합이 고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일이 많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 사업을 진행하던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고민거리인 것은 분명하다. 찬반이 나누겠지만 활성화 지역이나 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택조합과 같은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활성화되고 있던 지역의 공동체가 갈등을 통해 해체되고 지역이 다시 과거와 같이 슬럼화될까 걱정이다.

광주는 택지개발 지역 이외에도 도심 지역 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고층화·거대화 되는 방향으로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도시의 골격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교통, 경관, 환경 등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과 지역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도 높이·형태·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용도 용적제, 가로구역 높이 제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 마련과 같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 분양이 잘되어 사업성이 좋고 고층으로 짓게 되면 주거 공간 간격이 넓어져서 통풍축, 바람길, 보행로의 개방성 등 도시의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층수를 왜 규제하나고 의

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이며 나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유럽도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성 문제,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 행동 제약에 따른 정신질환 등 행동학적·사회병리학적 문제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고층·고밀의 아파트 공급 정책에서 저층·고밀 주거의 공급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우리에게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에 힘입어 고층 아파트는 여전히 최고의 주거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30년 후 아니 더 일찍 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도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외국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에서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정주를 실현하는 밀레니엄 빌리지라 건설되

었다. 상대적으로 고밀 주거로 개발되었으나 우리와 같은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건설은 찾아볼 수 없다.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생기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에너지 사용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신도시는 저층 고밀, 복합 개발, 거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층과 복도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민들 간 소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처럼 나라별·도시별로 살고 싶은 주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밀 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힘들지만, 고층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개발은 고층 아파트라는 한 가지 카드밖에 없다.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금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광주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조칼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며



김성진 변호사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건의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관련 언급으로 금강산 관광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대아산 백천호 상무가 지난해 한국

관광정책에 기고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89년 1월 기업인 최초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복측을 방문한 당시 현대그룹과 북측 사이에 맺은 의정서로 합의되었는데, 그 후 9년 여의 우여곡절을 거쳐 199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함께 1998년 6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그리고 햇볕 정책이 뒷받침되어 금강산 관광이 탄생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이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개성 관광, 백두산 관광, 천연가스관 등의 사업권을 확보하여 남북 경협이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계획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본격 추진되어 남북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을 중대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연계) 등 3대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비경제적 분야 교류를 통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있었다. 남북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때에도 금강산 관광은 평화 시위의 장로 기능하고 주변 국가 및 세계에 남북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금강산 관광이 청소년·대학생·여성·농

민·종교 등 단계각층의 화합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측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기도 했다.

여러모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현실이 안타깝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10여 년이 지났고, 지금은 남북미가 한반도의 평화 및 냉전 체제의 종식을 위해 만나 협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리얼미터가 2019년 2월 27일 진행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68.9% 반대 26.5%로 국민 대다수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미 간의 협의에 활로가 열리기를 바란다.

社說

버젓이 골프 즐기는 전두환의 후안무치

5·18 관련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씨가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 씨가 멀쩡하게 운동을 즐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지난 7일 전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그제 자신의 SNS에 대한 내용을 올렸다. 녹취 기록을 보면 전 씨는 5·18 당시 광주 학살 책임을 묻는 임 부대표의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라고 부인한다.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려?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반박했다. "천 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을 언제 납부할 거냐"는 물음에는 "자네가 좀 내 주라"며

몰염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임 부대표는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물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스윙하는 모습에 기력이 넘쳐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해 기소된 전 씨는 지난 4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5·18 단체들은 전 씨의 대국민 사과문이 드러났다면 전 씨를 재판에 즉각 출석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씨의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태는 진정한 참회와 속죄, 사과를 기대했던 광주 시민의 실낱같은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 버린 처사다. 재판부는 전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헬기 사격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12주년 맞은 무안공항 세계로 뻗어 간다

무안 국제공항이 지난 8일로 개항 12주년을 맞았다. 무안공항은 올해 역대 최고 이용객 실적을 거둔 가운데 다음 달에도 국제노선이 잇따라 취항한다. 따라서 올해 목표인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항 첫 해인 2007년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은 고작 1만5천 명이였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현재 이용객은 78만8천5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2천996명에 비해 무려 81.0%가 늘어난 것인데, 전국 15개 공항 중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실적은 올해 7월 이후 단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주요 노선 중 하나였던 일본 노선들이 모두 중단되는 등 악재 속에서도 이룬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특히 이용객 증가의 한 원인으로서는 '공항 접근성 향상'을 들 수 있다. 현재 광주 역에서 12회, 목포역 11회 등으로 1시간

30분 간격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공항 내 주차장 1천871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등 이용객들이 주차비 부담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비좁은 여객 층사와 부실한 면세점 등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공통된 불만·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전남도 및 광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군공항 이전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논보라 치는 연병장을 포복하며/ 원산 폭격 쪼그려뒹기 피티체조 선착순/ 처지면 돌리고 쓰러지면 짓밟히고/ 꿈틀대면 각목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내무반을 들 어서면/ 한강철교 침상 위에 수류탄 철모 깔고 구르기/ 군화발로 조인트까지 나뒹 굴고..." 박노해의 '삼청교육대'는 80년 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을 고발한 시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악을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삼청(三淸)교육대를 운영했다.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경찰서당 수백 명씩 삼청이라는 명령이하달 되기도 했다. 잡혀 온 이들 중에는 '체불입금 요구하며 농성 중'에 끌려오거나 '노가다 일 나간 어머니 마중길에 불량배로 몰려' 억울하게 들어 온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순화교육 명목으로 행해진 만행은 정치적 보복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었다. '쓰러 20도의 땅바닥에서 동상 걸려 진물 흐르는 발바닥'으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별건 피땀을 싸거나 '장파열 뇌진탕 질식사'로 하나둘 죽어 나가는 처참한 실상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

었다.

악몽과 같은 삼청교육대를 소환한 것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다. 그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공판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감을 따는 건 공판병 업무'라는 취지의 말을 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영입을 위해 공물였던 '귀한 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도교(道敎)에서는 '삼청(三淸)을 최고 이상향으로 본다. 신선이 사는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을 일컫는데 안락한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박찬주 씨가 상징한 삼청교육대는 박노해가 절규했던 '힘없는 자들의 절천지탄(徹天之恨)'이 되살아나 부들부들 치 떨리는 80년 그 겨울이 아닐까 싶다. 필자는 한때 한국당 영입 1순위였던 박찬주 씨에게 삼청교육대 입소를 권하고 싶다. 오해 마시라. '삼청(三淸)은 공정의 소리, 민생의 소리, 인권의 소리를 듣는 '공감학교'니까. /박성진 문화부 부장sky@

기 고

교육 공무원 내 차별 해소를



박은영 광주시 복지연대 교육복지분과 대표

인권의 존엄과 정의를 존중하며 인권 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시의 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의 처우 개선 수당비 지급권을 손에 쥐고 직종 간 대립과 차별, 갈등을 수년간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할 주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 복지사 직종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11곳으로, 가족 수당은 13개 지역에서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 "타 교육 공무원 직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등급제(호

봉제)를 포기하라"라고 회유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 공무원 직종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은 교육 복지사 임금이 삭감되지만, 결국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며 등급제(호봉제)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때 시교육청의 말을 믿고 교육 복지사 직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등급제(호봉제)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경력 6년 차 이상은 평균 20만 원 정도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신설된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에서 교육 복지사 직종은 제외되었다. 시교육청은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교육 복지사 직종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부서는 오히려 교육 복지사 직종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상 편입 희망 여부 결정 통보서 제출' 공문을 보냈다. 내용인즉 '비정규직 직종별 처우 개선 대상에 편입하려면, 교육 복지사 직종보다 기본급이 낮은 영양사와 사서 직종 수준으로 낮추는데 동의해야 처우 개선 수당인 교통비,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지급한다'라는 또 한 번의 강압과

회유였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강압과 회유 행위 및 교육 복지사 직종에 복리 후생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당시 광주시 교육 훈령 제 116호 제2조 11항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에 위배된 처사였다.

근무 경력 2년 차 기준으로 월급을 타 직종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10년도 당시 교육 복지사의 월급은 영양사나 사서 직종에 비교하면 11만 8690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직종에서 제외된 후 2018년에 사서가 17만 4040원, 영양사가 29만 6040원을 교육 복지사 직종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매해 그 임금 격차 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그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 이후 시교육청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권을 행사하면서, 처우 개선 수당비 지급 직종과 비지급 직종 간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교육 공무원 직종 간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 복지사 직종의 처우 개선 수당비 비지급 관련하여 시의원에게 물어 봤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수당

을 받지 않는 직종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어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겠다"하는 것은 웅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만난 한 시의원은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 증액은 일반적으로 시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나 타지를 안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보다 임금이 더 높은 교육감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도 직급과 월급에 상관 없이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은 다 받고 있다. 그보다 임금이 낮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는 기본급이 많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 수당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 측의 '선택적 정의'는 합리적이까? 그 기준과 적용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간의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에 걸맞게 교육 복지사 직종에 동일하게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416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33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